

# 이번엔 '14만 전체 회의'...거세지는 경찰 반발

### 30일 경감·경위급의 확대 추진 갈등 최고조 경찰국 사태 분수령 직협 주도 홍보전·1인 시위 지속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태가 확산하면서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직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되는 등 경찰 일선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전국경찰서장협의회가 총경 계급의 상징성으로 인해 논란이 됐다면, 30일 전체 회의는 참석 규모에 따라 '경찰국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처음 현장 팀장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중 경감은 26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김 경감은 "참석 대상자를 14만 전체 경찰로 확장함에 따라 수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되기에 강당보다는 대운동장으로 회의 장소를 선택하게 됐다"고 덧붙혔다.

그러면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30일 오후 2시 14만 전국 경찰은 지난주 개최

한 서장회의와 동일한 주제로 회의를 연다"며 "충경들에게 하셨던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 회의는 유튜브로 생중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경감의 글은 올린 지 3시간도 되지 않아 1만8,000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했고 댓글도 700개가 넘게 달리며 지지를 얻고 있다.

한 경찰관은 "우리 경찰은 하나임을 보여줘야 한다. 30일 주간 근무자들은 참석자들의 공백이 없게 기본에 충실해야 명분이 선다"고, 또 다른 경찰관은 "쿠데타 같은 말을 하는데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정말 배부른 투정을 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현장 의견 수렴을 했고 공감에 있었다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도 모른다", "경찰 관련 뉴스에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자", "경찰관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도 동참하자" 같은 글도 이어졌다.

또 경찰국 신설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1990년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간다. 역사의 죄인이 된 것 같다" 같은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전국경찰서장협의회를 주도한 류상영 울산중부서장을 대기발령 했고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윤 후보자는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경찰 지휘부는 각 시도경찰청에 사실상 '집단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하달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쿠데타', '중대한 기강문란', '부화뇌동' 등 강경한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찰 직장협의회(직협)를 중심으로 한 거리에서의 대국민 홍보전과 1인시위도 더 불이 붙은 분위기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에 반대하는 입법청원을 받는 홈페이지도 개설됐다.

국가직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도 이날 오전 서대문구 미군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은 류총경 대기발령을 즉각 취소하고 감찰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복종이라는 건 정당해야만 가능하다. 우리는 영혼이 없지 않고 생각하는 공무원"이라며 "쿠데타나 특정세력이 선동한다는니 폄하하는 건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 국회 민생특위 가동 "국민 고통에 답할 시간"

### 29일부터 유류세 인하 등 민생법안 본격 논의 시작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26일 첫발을 뒀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및 여야 간사 선임 임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3고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 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

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룰 방침이다.

민생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29일 회의에서부터 시작된다.

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민생경제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렵고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 활동 기간은 석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고, 국감 등 정기국회와 겹쳐서 신속하고 내실 있는 특위진행이 필요하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민생정치를 실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참석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민선 7기 지방공무원 수 증가 3년 통계 분석 약 3만명 늘어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재임 기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뀐 소방공무원을 제외하면 전국 지자체 공무원 숫자가 약 3만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은 감소했으나 시·군·구 단위 공무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업통계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공무원은 30만 1,9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말보다 6.5%(2만932명) 감소한 것이다.

다만 2020년 4월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3만1,000명가량 지방공무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리더스인덱스는 분석했다. 이 기간 국내 총인구는 5,182만6,059명에서 5,163만8,809명으로 0.36%(18만7,250명) 줄었다.

지방공무원 수 증감 현황을 단위별로 보면 소방공무원이 소속됐던 광역단체 본청 소속 공무원은 줄었으나 시·군·구 소속 지방공무원은 증가했다.

본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2018년 말 9만 8,120명에서 지난해 말 5만5,037명으로 43.9%(4만3,083명) 감소했다.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3년간 지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대구시였다. 대구시 소속 지방공무원은 1만2,912명에서 1만1,218명으로 13.1%(1,694명) 감소했다. /연합뉴스

## 6대 국정목표·120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

### '지방시대 과제' 추가 국정관리시스템 구축

정부는 2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면서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기본 부문(정치·행정·경제·외교안보)에 미래 지향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은 6대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으로 구성됐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 주요 과제가 포함됐다.

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에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 들어갔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는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의 과제가 반영됐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추후 건의키로 했는데, 이번엔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국정과제를 추가 반영해 총 120개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오리지널 두유 - 베지밀

#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겐공, 고칼슘, 비타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린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아연, 셀레늄(Se)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1주 분량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소필 트러스트 www.edaymail.com 1호 외 | 고객상담실 080-9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